

2024학년도 모의논술

논술시험(인문계)

□ 답안작성 유의사항

- 가. 시험 시간은 100분이며, 문제별 답안은 반드시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작성해야 합니다.(문제번호와 답안번호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나.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다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한 경우 평가하지 않습니다.
- 다. 답안은 지정된 작성영역 내에 작성해야 하며, 지정된 작성영역을 초과하여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 라. 답안 작성영역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안됩니다. 인적사항(성명, 서명 등) 또는 답안과 관계없는 표기를 하는 경우 결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마. 흑색 필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연필·샤프 사용가능, 답안작성 중 필기구 종류 또는 색상 변경 불가)
- 바. 답안 수정 시에는 취소선을 긋거나 지우개로 지워야 하며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 답안지 전면 상단에 본인의 인적사항(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논술시험 (인문계)

[문제1] <제시문1> ~ <제시문4>는 불평등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40점)

<제시문1>

소득 재분배를 실현하여 계층 간 차이를 줄일 수 있다는 믿음은 허상에 불과하다. 재산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최대한 광범위하게 분산시켜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부와 자본의 편중으로 인한 정치권력의 불평등을 근원적으로 막기 불가능하며, 정치권력이 기득권층이나 특권층을 위해서 행사되게 마련이다. 특히 부유한 계층이 빈곤한 계층을 정치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정치적 결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몰고 갈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왜곡 현상은 교육 영역에도 전이되어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저소득층 자녀들이 누릴 수 없는 특권과 혜택을 안겨주고, 부의 대물림 현상이 고착화된다. 세계 여러 나라에 만연한 학력 경쟁에서 학력은 인적 자본 또는 생산 능력의 준거로서보다는 상대적 우열을 가리는 차별화의 근거로 자리를 잡았다. 예를 들어, 학력은 현장 조직에서 해당 직업의 시장가치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신입자의 조건을 통제하고 공급을 제한하는 장치가 되어버렸다. 따라서 학력 경쟁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으면 사회적 폐쇄라는 보호장치를 확보하게 된다. 높은 학력과 명문 학벌은 지식과 기술의 습득보다는 전문성을 인정받는 중요한 절차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화가 사회적 배제 장치로 이용됨에 따라, “수요와 자유 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어야 한다”라는 시장 경제 원칙이 붕괴된다. 파킨(Parkin, 1979)의 설명에 따르면, 배제는 기득 집단이 현재 보유한 이점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위해 미득 집단이 재원이나 보상에 접근할 수 없도록 봉쇄하는 전략을 의미하며, 신용·자격증주의나 전문가주의에 의거한 자격의 구비가 필수적 조건으로 요구된다. 기득 집단은 자신들이 향유해온 기회가 미득 집단의 도전에 의해 상실될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자신들이 누리는 기회에 미득 집단이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의 의지를 꺾거나 무력화한다. 결국, 사회의 기본재가 시장경쟁을 통해 분배되기 이전의 상황을 공정하게 조성하기보다는 불공정한 시장경쟁을 통해 배분된 기본재를 사후적으로 재분배하는 전략은 시장경쟁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또한 그 귀결로 경제력의 불평등에 기인하는 정치적 불평등을 심화시킴으로써 정치적 민주주의의 토대를 잠식한다. 따라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의 상황을 최대한 공정하게 조성함으로써 경쟁의 결과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산자본의 독점과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증폭시켜 시장경쟁과 민주정치 과정을 왜곡시키고 부유한 자산가들이 다른 계층들을 자의적으로 지배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사이의 공정한 협력체계를 수립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경쟁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시민에게 완전히 협력적인 사회구성원이 되기에 충분한 생산수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 수단들에는 실물 자본뿐만 아니라 인적 자본, 즉 지식과 제도들에 대한 이해, 교육된 능력, 훈련된 기술이 있다. 이 방법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한 개인들로 간주되는 모든 시민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방법이며, 사회를 평등한 시민들 사이의 공정한 협력체계로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제시문2>

한 사회의 제도와 행위는 사회적 생존이라는 요구를 충족시켜가는 과정에서 사회구성원들이 수행하는 기능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는 하나의 유기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인자들이 각기 다른 역할과 행동을 수행하면서 그 유기체의 생존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구성원들이 처한 환경은 각기 다를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구성원마다 다른 생존 요구에 직면하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들이 충족되는 방식도 다른 것이다. 제도나 행위는 그것들이 충족해야 할 기능적 필요성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전체 사회 체계의 적응과 조절에 사회 제도나 행위들이 공헌하는 정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모든 사회는 구성원들이 능력에 따라 각기 다른 과업들을 수행하도록 구조화되고 운용된다. 비록 직무들이 윤택하지 않거나 강압적인 것들이라 해도 그런 일들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선발, 사회화, 그리고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하다. 원시사회에서도 사냥을 하거나 채집을 하거나 또는 음식물을 준비해가는 등 역할 분화가 존재했다.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구성원들이 공헌한 바가 모두에게 드러나며, 모든 구성원은 부족의 의식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집단은 공유된 가치체계 및 인성을 계발해간다. 그렇게 함으로써 집단의 연대

논술시험 (인문계)

의식이 유지된다. 역할 분화와 사회적 연대 의식은 중요한 사회생활의 요건들이다. 이 둘은 원시사회나 현대 사회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다. 원시사회에서 이러한 요건들은 가정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비공식적 교육활동을 통해 충족되었다. 그러나 세대 간에 역할이 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젊은이를 교육하여 역할을 분화시키고 집단 연대감을 성취할 수 있는 더욱 공식적인 구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편성과 의무성을 띤 공교육 체계가 확립되었다. 학교 교육은 변화하는 경제·사회체계에 적합한 기술과 태도를 기르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며, 개인에게는 취업과 소득, 위신, 권위 등이 공평하게 분배될 가능성을 높여준다. 학교는 능력과 재능에 입각한 선발 장치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소득, 사회적 지위 및 권위가 능력이 아닌 가족적, 인종, 성 혹은 종교 등과 같은 귀속적 특성들에 따라 배분되는 것을 막는 장치이기도 하다. 재능에 대한 보상은 근대화의 필요조건이다. 기능적으로 잘 조직된 이상적인 근대사회에서는, 특정 영역에서 똑같은 업무수행 능력과 동기를 지닌 개인들은 동등하게 보상받는다. 전통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귀속적인 신분을 벗어나서 신분을 상승할 기회가 거의 없었고, 적합한 출생권을 가진 사람만이 지도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을 수 있었다. 반면,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부모의 지위 대신 학교가 선발에 있어서 주된 위치를 차지한다. 더욱이 학교는 개인이 기존의 사회질서 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데 필요한 훈련을 제공한다. 현대의 학교는 의무교육제도가 없던 시대보다 훨씬 능률적이고 공정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과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제시문3>

정의는 그저 실행되는 것만으로는 안 되며 ‘눈에 띄도록’ 행해져야 한다. 즉, 정의는 의심의 여지없이 확연히 눈에 띄어야 한다. 이는 한 국가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며, 세계화에 관한 전반적인 찬반론이나 성공적인 세계화를 논할 때도 정의의 필요조건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경제적 세계화가 전체적 목표로서 뛰어난 장점이 있으며 전 세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주장에도 나름 근거가 있다. 그러나, 경제 발전 논리에 치우친 세계화가 극빈층을 비롯해서 모두에게 명백한 축복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반론은 그 자체로 세계화라는 목표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못하지만, 세계화가 ‘명백하고 의심의 여지없이’ 좋은 목표라는 점을 모든 이들에게 이해시키기가 왜 어려운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사실 세계화에서 실질적으로 따져볼 가장 우선적 쟁점 사항은 경제적 유대관계, 기술적 진보, 정치적 기회가 안겨주는 혜택을 박탈 계층과 약자들에게 적절한 이익이 되는 하나의 방편으로써 잘 활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즉, 경제 발전의 중요성 그 자체 및 세계적 경제 관계를 비난하는 차원이 아니라, 세계화의 혜택을 공평히 분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와 같은 형태의 세계화를 열렬히 지지하는 이들은 세계의 빈곤층이 대체로 더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는 식의 견해를 펴며, 그것을 옹호론의 중요한 근거로 삼기도 한다. 세계화가 빈곤층에게 불공평하지 않고 이들 빈곤층 역시 혜택을 보고 있는데 무슨 문제냐는 논리다. 과연 빈곤층은 더 가난해질까, 더 풍족해질까? 설령 빈곤층이 조금 더 풍족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빈곤층이 세계화를 통한 경제적 상호 관계 및 막대한 잠재적 혜택을 공평하게 분배받는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국제적 불평등이 근소하게나마 확대되고 있느냐, 축소되고 있느냐도 적절한 질문의 초점은 아니다. 오히려 중요하게 따져야 할 쟁점은 정치, 경제, 사회적 기회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어떤 식의 국제적, 국내적 합의를 선택하느냐이다. 세계화된 국제 관계 속에서 시장경제는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심지어 특정 국가 내에서조차 단독으로 작동할 수 없다. 세계화된 관계 속에서는 시장을 포함하는 전반적 시스템(물리적 자원의 분배 방식, 인적 자원의 개발 방식, 기업 관계의 보편적 원칙, 구축되어 있는 사회보장적 합의의 양상 등)이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매우 다른 결과를 유발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조건들 자체가 국내외에서 작동되는 정치, 경제, 사회적 제도에 크게 의존하기도 한다. 대체로 세계자본주의는 민주주의 확립, 기초 교육 확대나 사회 약자들의 사회적 기회 증진 같은 문제보다는 시장 관계 영역을 팽창시키는 쪽에 훨씬 더 관심이 쏠려 있다. 그로 인해 국가 간 불평등은 물론, 평등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제반 조건이 취약한 여러 나라에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따라서, 단순히 시장의 세계화에 불과한 세계화는 세계 변영의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접근법이며, 자국 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극적인 여러 부유한 나라들에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세계의 한 특징으로 자리 잡은 불공평은 특히 제도적 합의에서 해결되어야 할 여러 가지 책무와 밀접하게 이어져 있으

논술시험 (인문계)

며, 이러한 책무들은 기본적인 세계 정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는 불공평하면서도 비효율적인 무역 제재, 에이즈 등의 질병치료에 매우 중요한 구급약품 배급을 가로막는 정치적 장벽, 그리고 백신처럼 주기적으로 새롭게 개발해야하는 의약품 개발 동기를 저하시키는 자본의 논리 등이 포함된다. 한 나라 안으로 시야를 좁혀 보아도, 불평등이 심화된 사회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책무들이 제대로 해결되기 어려움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제시문4>

<진상> “등나라 군주는 진실로 현명한 군주임에는 분명하지만, 아직 도를 듣지 못한 듯합니다. 어진 자는 백성들과 함께 밭을 경작하여 먹으며 스스로 불을 지피 밥을 지으면서 정치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등나라는 백성에게 취한 것을 저장하는 곡식 창고와 물품 창고를 두고 있으니, 이것은 백성을 괴롭혀 자신을 봉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어질다 하겠습니까? 어진 군주란 백성과 똑같이 농사짓고 밥도 지어 먹으면서 동고동락해야 합니다.”

<맹자> “농사꾼인 허선생은 반드시 스스로 곡식을 심은 뒤에 먹던가?”

<진상> “그렇습니다.”

<맹자> “그레요, 그렇다면 허선생은 머리에 관을 쓰던가?”

<진상> “그렇죠. 관을 씁니다.”

<맹자> “무슨 관을 쓰던가?”

<진상> “흰 비단으로 짠 관을 씁니다.”

<맹자> “그것도 스스로 짠 것인가?”

<진상> “아닙니다. 자신이 경작한 곡식을 주고 바꿉니다.”

<맹자> “그렇단 말이지.. 허선생은 가마솔이나 시루를 가지고 밥을 지으며, 쇠붙이로 밭을 경작하던가?”

<진상> “당연히 그렇습니다.”

<맹자>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인가?”

<진상> “아닙니다. 곡식을 주고 바꿉니다.”

<맹자> “곡식을 시루나 솔 같은 철제와 바꾸는 것이 옹기장이나 대장장이에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니, 마찬가지로 옹기장이나 대장장이 역시 그들이 만든 그릇이나 연장을 곡식과 바꾸는 것이 어찌 농부에게 피해를 주는 일일까? 정치를 하는 대인의 일도 있고 생업에 종사하는 소인의 일도 있다. 한 사람의 몸으로 여러 기술자들이 하는 것을 겸비할 수 있다고 하여도 반드시 스스로 만들어 써야만 한다면, 이는 천하 사람을 끌어들이 도로에서 쉴 틈 없이 분주하게 다니도록 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스스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 ‘백성을 다스리는 데 마음을 다하는 사람도 있고 생업에 종사하는 데 수고를 다하는 사람도 있으니,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남들을 다스리고 힘으로 애쓰는 자는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남들에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세금을 내어 마음을 다하는 자들을 먹여 살리고, 남을 다스리는 자는 백성들에게 얻어먹고 살아가는 것이 천하의 공통된 원리이다.”

논술시험 (인문계)

[문제2] A국과 B국을 비교하는 <자료1>과 <자료2>를 근거로 [문제1]의 두 입장을 각각 비판하시오.¹⁾ (4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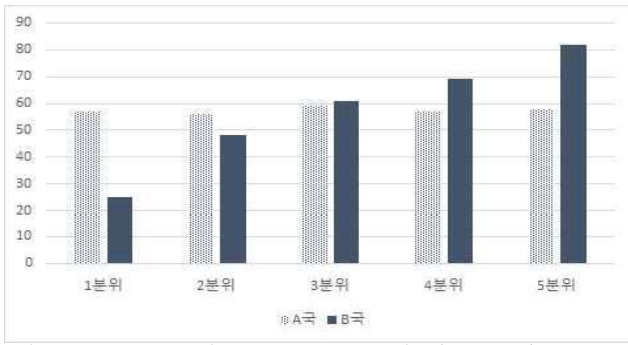
주1) 자료에 제시된 내용 외에 두 국가의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함.

<자료1> 두 국가의 경제지표 (2015~2019 5년 평균)

| 경제 지표 | A국 | B국 |
|-----------------------------|--------|---------|
| 국민소득 (미국 달러 기준) | 23,002 | 30,999 |
| 실업률 | 4.80% | 2.73% |
| 특허개발 건수 | 16,367 | 119,012 |
| 인구 1,000명당 혁신기업 창업 수 | 1.70 | 4.50 |
| GDP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율 | 2.50% | 6.80% |
| 국가 글로벌혁신지수 순위 | 15 | 5 |
| 향후 5년 국민소득 연 성장률 전망치 (세계은행) | 2.0% | 3.6% |

<자료2> 두 국가의 사회지표 (2015~2019 5년 평균)

<자료2-1> 소득 분위별 대학 진학률²⁾ (단위:%)



주2) 소득 1~5분위는 국민의 소득을 5구간으로 나누어 분류한 것으로, 5분위는 최상위 20%를 나타냄.

<자료2-2> 사회 안정 지표

| 사회 안정 지표 | A국 | B국 |
|--------------------------|-----|-------|
| 소득집중도 ³⁾ | 35% | 67% |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 | 16% | 38% |
| 인구 10만 명당 생계형 범죄 발생 건수 | 641 | 1,916 |
| 국가 정책 신뢰지수 ⁴⁾ | 81 | 42 |

주3) 소득 상위 20% 인구가 전체 국민의 소득 중 차지하는 비율.

주4)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1~100점으로 나타낸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문제3] C국은 실업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실업자의 학력에 따라 특별취업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이 지원금을 고학력 실업자에게 더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과 저학력 실업자에게 더 배분해야 한다는 두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 중 본인은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지 밝히고, [문제1]의 제시문과 [문제2]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시오. (20점)